

北韓經濟構造와 問題點*

李 泰 旭

- | | |
|-------------------|------------|
| I. 序 言 | IV. 北韓經濟構造 |
| II. 北韓經濟體制的 特徵 | V. 結 言 |
| III. 北韓의 經濟計劃과 實績 | |

I. 序 言

南北韓은 분단된 상태에서 40餘年間 아무런 실질적인 交流없이 相異한 體制속에서 平行선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와 같은 길의 연속은 영원한 분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統一된 하나의 民族國家를 이루어 보겠다는 간절한 所望을 온겨레는 갖고 있다. 언젠가는 韓半島가 統一이 되어 單一民族國家를 이룩하여야 하는데, 南과 北은 근본적인 理念과 目標의 차이 때문에 和合의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기필코 和合의 길을 찾아야 하며,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없이 어렵다는 점이다.

和合에 의한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서는 언젠가는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협상·타협을 이루기 위하여 거쳐야 할 필수적 중요한 단계는 非政治的 次元에서의 交流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卽 南北韓이 서로 交流를 통해서 政治·經濟·社會·文化的인 面에서 思想과 理念의 差異와 長期間의 分斷에서 오는 異質化를 더 深化시키지 않고, 오

* 本 研究은 1987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히려 異質化된 것을 克服하고, 同質性을 높이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南北交流에 있어서 文化的·社會的 側面에서 交流도 중요하겠지만 經濟交流 및 協力 또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經濟交流 및 協力이라고 하였지만, 이로 인한 兩側의 政治的, 經濟的 利害關係는 복합적인 것이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利害들이 相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交流 및 協力の 必要性和 可能性 如否를 分析하는 데는 經濟的 要因과 經濟外的 要因을 同時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實質的인 經濟交流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이념과 체제의 근본적 차이 및 대외적인 체면을 고려할 때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은 서로 존재할지라도 일방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형식의 교류는 어렵다는 것이다. 互惠·平等의 原則이 아니라 압도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한다면 더욱 분단의 상황은 深化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을 살펴본다면 경제교류에 의한 最短期的인 效果에 대하여서는 몰라도 점진적으로 교류를 증진해 나아감에 따라 中長期的으로는 交易增進, 더 나아가서 資本과 技術協力에 의한 經濟利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經濟統合에까지 이르기 전이라도 韓半島를 분단된 두 개의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순한 中介貿易, 物資交流를 벗어나 自由貿易地域 設定, 關稅協定 등으로 진전이 가능하여 진다면, 이것은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賦存資源과 地域特性에 따른 分業化를 통한 利得도 발생한다. 또 資源의 共同開發 및 利用으로 效率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 南北交流의 增進으로 또한 信賴增進을 유발시켜 서로의 窓口를 통하여 北韓의 경우는 美·日·西歐와 같은 西方進出, 南韓은 蘇·中·東歐에로 進出이 넓혀질 수도 있다. 또한 交流를 통한 경쟁에 따른 경제운영의 효율화와 기술수준의 提高를 가져올 수도 있다.

理念과 政治體制를 달리하는 東西間의 交易 및 經濟協力, 특히 外交關係가 存在하지 않는 東西間에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경제적 필요성이 꼭 정치적 필요성을 同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同族間의 分斷된 東西獨間的 경제교류 및 협력을 보면 경제교류의 필요성은 경제적 요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東西獨間的 交流를 보면 韓半島戰爭과 佰林障壁과 같은 위기시에는 교류가 저조하였지만 1950年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진되어 왔는데, 西獨은 東歐圈과 交易增進보다 東獨과의 交易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東獨은 西方과의 교역에서 볼 때 西獨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며, 대외교역 중에서는 蘇聯 다음으로 중요한 相對國이다. 이러한 關係增進은 同族에다 同一語, 비슷한 生産技術能力 그리고 西獨의 互惠의인 信用提供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事實 東西獨의 交易增進은 兩獨의 利害關係에 있어서 각기 다른 목적아래 이루어졌다. 즉 西獨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東獨은 政治的 利害에 앞서 경제적 이익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여하간 이러한 교역을 통해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유지,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이다.

또 다른 分斷國으로서 自由中國 臺灣과 中共을 들 수 있다. 1949年 國民黨이 大陸을 떠난 후 臺灣과 中共은 政治的으로 현재까지 줄곧 對立해 왔고, 이러한 政治的 對立이 雙方經濟交流에 있어서 直接的 접촉을 不可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中共은 문화혁명 이후 登小平의 등장에 의하여 경제개혁 및 개방을 수행함과 매를 같이하여 1979年에 「三通」(通航, 通郵, 通商)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臺灣과의 교역을 國內問題視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對하여 臺灣은 國共 不妥協, 不協商, 不接觸이란 「三不」政策에 따라 公式的으로는 兩地域間의 직접經濟교류를 금하고 있었지만 實質的으로는 經濟的 利益때문에 中共과의 間接貿易은 묵인하고 있다. 제3국을 經유하는 通路는 무조건 제한하지 않는다는 政治와 經

濟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中共과 臺灣의 정책변화에 의해 간접무역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서 이산가족방문 등 양국의 非政治的 交流가 증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臺灣에서 中共의 「三通」을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이들 東西獨, 臺灣—中共과 비교하여 모든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40여년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全無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든 交流의 出發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出發點은 南北韓의 異質性이 더 심화되기 전에 時期가 빠를수록 좋지만, 現實적으로 實現可能性을 찾는데 문제가 있다. 交流 및 協力の 필요성은 自明하지만 實現可能性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各各 상대방 경제에 대한 情報와 그 정보에 의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상 상이한 經濟體制에 따른 어려움과 統計上의 어려움이 存在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北韓經濟發展과 現況 및 政策을 우리의 것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研究에는 南北韓 經濟體制의 本質의 差異點, 經濟開發政策 및 그 成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경제의 실상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첫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南北韓 두 경제의 비교보다는 우선 北韓經濟의 全般的인 構造的 特性과 그리고 이러한 特性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경제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研究의 目的이다.

II. 北韓經濟體制의 特徵

社會主義經濟體制는 경제구성원(개인, 조직)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조정함에 있어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적 강제와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統制하고, 그리고 행정체제의 수직적 조직에서 上部와 下部는 각각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료적이고 수직적 조직을 가진 사회주의체제는 個人이나 團體가 經濟

的 利益이란 動機에 의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로서 水平的 關係를 갖는 市場經濟體制와는 근본적으로 달리고 있다.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행동이 조정된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는 화폐, 가격 그리고 이윤이란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反하여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에서 우리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經濟改革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관료적인 운영방식을 점진적으로 탈피하면서 市場의 役割을 도입하는 과정으로, 다시 말하여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으로 移轉하여 가는 과정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경제를 볼 때 對外的으로는 70年代 以後에 와서 西方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그리고 1984年에는 合作會社運營法(合營法)을 제정하는 등 경제개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이다. 즉 古典的인 社會主義經濟體制라고 불리우는 스탈린시대의 소비에트형의 경제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의 특징은 경제계획을 중앙계획위원회(北韓의 경우 “國家計劃委員會”)에서 작성하여 최고정치집단, 例로 黨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委員會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國家法으로 확정된다. 모든 계획사항은 上部로부터 下部組織으로 하달되는데, 최하위에 있는 國公有的 企業體, 또는 집단농장은 물량단위로 표시된 생산목표, 자원투입량, 투자재원, 비용, 새로운 기술활용 등 모든 세부적인 지시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명령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직성(rigidity)이다. 한번 계획된 것은 수정하기 힘들며, 계획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관과 계통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여건변화에 따른 適期에의 修正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계획당국은 緊張된 計劃目標(taut planning)를 추구하여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산출물을 얻어내는 動員效果(mobilizing effect)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도 경제의 경직성을 유발시킨다.

古典的 社會主義經濟體제의 또다른 問題點은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情報의 不完全성과 함께 경쟁이나 個人의 選好가 반영되지 못하여 動機誘因의이지 못하여 經濟的 非效率性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형적인 獨裁모델로서 경제적 合理性보다 政治的 合目性, 그리고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실용성과 전문성보다 黨性과 革命性을 더욱 강조하는 점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 즉 비능률성과 低生産性을 시정하기 위하여 社會主義國家 중에서도 일찌기는 유고, 헝가리 등 東歐¹⁾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中共이나 蘇聯에서도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市場的인 要因을 도입함으로써 生産活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경직적인 中央集權的 管理體制를 고수하면서 미봉책으로 制度의 改善을 통한 부분적인 변화노력만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經濟는 古典的인 소련형의 사회주의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一般의 特性 이외에 北韓特有的 政策路線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노선에서 유발하는 經濟特性을 갖고 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唯一體制確立과 함께 발전하여 온 「主體思想」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에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지도지침은 「思想에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 自衛」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중 특히 「經濟에서 自立」이란 1956年 黨中央委員會 12月 全員會議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는데 그 이후 1958年 北韓社會主義制度를 완전히 확립함과 함께 경제에서 自立을 구현한다는 目標아래 ‘自力更生의 原則’을 경제정책의 基本路線으로 채택하였다.²⁾ 그리고 더 나아가서 自力更생을 위하여 生産手段을 自體調達한다는 이유와 함께 主體思想 중에서 「國防에서 自衛」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軍需

1) J. Kornai, (1986).

2) 「北韓概要」(1984), p. 12, p. 94, p. 345, p. 361.

産業育成과 관련하여 ‘重工業優先政策’을 또 다른 하나의 經濟의 基本路線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主體思想에 연유한 ‘自力更生の 原則’과 ‘重工業優先政策’路線이 北韓經濟를 閉鎖經濟로 이끌어 왔고 또한 産業部門 間에 不均衡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북한경제의 特性인 동시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自立經濟란 한 국민경제가 對內的으로는 投資財源을 自體調達하여 생산능력을 擴大해 나가며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이룩하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종국적으로는 경제후생 증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뜻은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自給自足한다는 것과는 다른 뜻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自立」이란 말을 自給體制를 구축한다는 뜻, 즉 ‘自力更生の 原則’으로 받아들여 自體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한다는 사회혁명관과 金日成 唯一體制라는 정치목적을 위한 自立經濟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自給自足經濟(autarky)를 뜻하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도 초기에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스탈린이론의 ‘一國社會主義論’을 敎條의으로 模倣하여 폐쇄적인 自給自足經濟으로 指向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국제경제의 분업과 경제협력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을 상실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초에는 유럽에서 美國의 「마샬」계획에 對應하기 위해서 1949년에 창설하였던 소련 및 東歐의 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가 1960年代에 들어서는 規約改政을 通하여 國際分業促進이나 西方과의 貿易增進을 도모하여 종래의 폐쇄적 정책을 다소 修正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소련, 東歐, 그리고 최근에는 中共에서도 關照적인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보완하려는 制度改革과 함께 經濟開放化가 적극 시도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社會主義國家들의 路線變更에 重要하지 않고 主體思想에 의거한 自給體制를 계속 강력히 고수하면서 경제폐쇄성을 지속하여 왔

다. 예로써 북한이 한국전쟁후 전후복구시기인 1953~56년에 COMECON 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크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2,410 million)³⁾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회원국과 雙務的인 무역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유는 가입함으로써 國內問題에 대한 政治的 介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1960年代 들어와서도 소련이 COMECON 을 통한 共產圈의 經濟統合과 國際的 分業強化를 시도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에 대하여 一次產品의 開發과 輸出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自立的 경제정책에 입각하여 一次產品의 加工 및 製造業發展에 주력했다.⁴⁾

北韓經濟가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完全한 폐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國內市場의 규모가 작고 資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對內指向的인 工業化政策의 결과 海外部門이 國民經濟에서 限定된 소극적인 役割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對外貿易에 關하여 北韓憲法(34條)⁵⁾에 明示된 것과 같이 國家計劃의 一部로서 완전히 국가통제하에 있으며 정부당국의 계획목표에 따른 국내 총자원 동원을 통한 경제계획집행에 있어서 需給에 차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貿易이 이루어진다. 이 뜻은 남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北韓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重要한 資材들은 自體生産하여 쓰도록 하되 生産되지 않거나 적게 쓰이는 것, 副次的인 것들만 對外貿易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國際貿易에서 비교우위를 무시하며 소극적인 對外去來만을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自力更生の 原則에 따른 自立民族經濟와 國防에서 自衛란 이유로 채택한 重工業優先政策이 北韓經濟의 產業不均衡이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後進小國經濟가 長期的으로 보아 重工業을 발전시키자면 우선 輸入代替와 輸出代替期間을 통하여 농업부문 발전에 따른 발전기반을 구축하면서

3) Kim Youg-Soo, (1987).

4) 延河濤(1986), p. 71.

5) 「북한개요」(1984), p. 364.

동시에 勞動集約的인 輕工業部門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技術的 基盤을 마련한 다음, 수출시장정보, 先進資本導入, 市場開發, 새로운 技術導入 등 對外協力關係를 이루어야만 중공업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內需市場의 협소, 技術落後, 財源不足 등으로 성공할 수 없다.

事實 南北韓은 日帝植民地經濟로부터 해방된 이후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서 人的·物的 資本 특히 技術水準面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지 아니했다. 그런데 북한이 小國經濟이면서 동시에 여건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 특히 소극적인 對外去來政策을 추구하면서 규모의 경제성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北韓이 小國經濟가 一般的으로 취하여야 하는 발전전략정책을 따르지 않고 軍需產業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消費財產業部門과 農業部門의 발전이 지연되고, 특히 投資財源 不足과 함께 非生產的 投資라고 간주하는 社會間接資本에 투자를 소홀히 하여 全體的인 產業間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고 불균형 때문에 경제발전에 둔화를 가져왔다.

Ⅲ. 北韓의 經濟計劃과 實績

소련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아래 「自力更生の 原則」의 政策路線을 유지하면서 북한은 경제계획을 解放 이후 1947년부터 시작하여, 그 사이 다소 계획조정을 위한 期間延長, 또는 다음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완충기 등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여 왔다.

북한경제 발전단계를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눈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 時期는 解放以後 50年代末(1946~1960)까지로서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社會主義基礎 건설을 본격적으로 한 시기가

다. 이 時期에 日帝植民地의 遺産을 除去하고 그리고 土地改革과 主要產業國有化를 추진했다. 그리고 韓國戰爭後에는 戰前 수준으로 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後半에는 農業集團化를 완성(1958)시키고 또한 主要產業 뿐만 아니라 中小商工業까지 社會主義的으로 경제형태를 개조하여 國營 내지 協同經營體制로 갖추었다. 이 시기에 실시된 계획은 第1,2次 1個年計劃(1947~49), 2個年計劃(1949~50), 戰後復舊 3個年計劃(1954~56), 그리고 5個年計劃(1957~60)이다.

둘째시기는 1961年以後 현재까지로 그 이전까지 確立된 사회주의 기초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좀 더 높은 발전단계로 이끌어 올린다는 목적이래 의욕적인 경제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成果는 오히려 50年代와 비교하여 저조한 상태다. 이 시기의 계획은 7個年計劃(1961~67), 7個年計劃의 3年 延長期(1968~70), 6個年計劃(1971~76), 새로운 계획의 준비기간인 완충기(1977), 第2次 7個年計劃(1978~84), 계획조정기간(1985~86), 第3次 7個年計劃(1987~93)들이다.

上記 計劃을 기본과업, 목표, 주요정책, 성과 및 평가, 특징 등을 중심으로 요약함으로써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대신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⁶⁾

1. 第1,2次 1個年計劃 및 2個年計劃(1947~50)

- 計劃의 課業은 1946年에 이미 제정한 「土地改革法令」과 「主要產業國有化法令」에 의거, 생산수단 국유화 및 협동화를 추진하면서 日本이 남기고 간 시설의 복구와 계획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 수립. 낙후된 산업과 농업발전을 도모하여 生活改善 도모.
- 計劃目標은 공업총생산 및 양곡수확의 높은 계고에 있었음. 그러나 우선적 목표는 식량문제 해결에 있었음. 이에 따라 1949年에 단보당 쌀

6) 계획내용의 자료 및 참고는 ① 北韓概要, ② 延河淸(1986), ③ 轉換期の 北韓經濟(1987), ④ 國土統一院의 보고자료.

생산량이 南韓을 압도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크게 호전되었음. 그리고 工業成長率도 年平均 49.9%에 달해 어느 계획기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2. 戰後復舊 3 個年計劃(1954~56)

- 과업은 戰前水準으로 전쟁피해를 복구. 목표는 국민소득을 1953年比 75% 증가, 공업총생산은 2.6 배, 그리고 양곡수확은 49年比 1.9%.
- 북한당국 발표에 의한 實積은 계획목표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
- 기본정책은 중공업 우선발전(공업부문 투자중 중공업부문 투자 81%)과 경공업의 급속복구. 따라서 대규모 공장복구건설과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광공업 부문에서 이례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계획에는 감소.
-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농업부문 투자는 저조(투자비율 9.2%).
- 재원은 소련, 중공 및 동구공산권으로부터 크게 원조받음.

3. 5 個年計劃(1957~60)

- 工業化의 기초구축과 衣食住問題의 기본적 해결이 과업. 계획목표는 국민소득 2.2 배, 공업총생산 2.6 배, 양곡생산 376 萬톤.
- 북한 발표에 의한 실적은 모두 초과 달성.
- 주요정책은 重工業優先的 發展, 輕工業 및 農業 同時的 發展, 그리고 농업집단화와 상공업 國公有化. 이 결과 광공업부문 생산액 중국영 및 협동단체의 생산비중이 1949年 90.7%에서 1955年 98.3%로 증가, 농업생산액 중에서 1949年 3.2%에서 집단농장화를 실시한 1954~58의 기간을 거쳐 개인농은 완전소멸. 상업부문도 1949年 56.5%에서 1955年 84.6% 증가, 중공업 對 경공업 비율은 1956年 81.1% 對 18.9%에서 1957~60년에는 82.6% 對 17.4%로 더욱 심화.
- 국민총생산 성장률(經常)은 57年 26.1%로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임. 58년에는 22.2%, 59年 12.2%로 크게 둔화. 그러나 전반적으로 南韓

經濟보다 우세한 양상.

- 戰後復舊 3 個年計劃 때와 같이 소련·중공 및 다른 공산권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계획기간 1 年 앞당겨 목표 조기 달성.

4. 第 1 次 7 個年計劃(1961~70)

- 전면적인 技術革新과 文化革命, 그리고 住民生活의 획기적 향상을 기한 다는 과업아래, 국민소득 2.7 倍, 공업총생산 3.2 倍, 양곡수확 600~700 萬톤 등이 계획목표.
- 국민소득 및 양곡수확에 대한 실적 발표가 없음. 그리고 遂行期間 3 年 延長 등을 미루어 보아 당초계획목표 실현못함. 추정에 의하면 年平均 目標 工業成長率이 18%였으나 실적은 12.8%. 공업목표 72%, 농산물 목표 57~67% 달성.
- 주요정책은 5 個年計劃 때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지속. 自力更生路線과 國防·經濟併進策. 따라서 1961~70 年 동안 중공업 對 輕공업 투자비율은 계속 불균형심화(Ⅳ. 산업구조 참조).
- 中·蘇 理念紛爭을 계기로 北韓과 소련의 관계악화. 북한은 60 年代 上半期부터 自主路線 채택. 中·蘇로부터 원조중단으로 인한 資本 및 技術不足. 同時에 軍事力 強化政策으로 자원낭비 등이 계획차질의 원인.

5. 6 個年計劃(1971~77)

- 과업은 기술혁명촉진, 사회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강화, 근로자의 힘 든 노동에서 해방, 국민생활의 균형적·체계적 발전촉진. 계획의 목표는 국민소득 1.8 倍, 공업총생산 2.2 倍, 양곡 700~750 萬톤.
- 실적은 계획목표를 상회했음. 例로 工業部門의 年平均 목표성장률이 14%였는데 실적은 16.3%. 양곡생산은 1975 年 800 萬톤으로 초과달성.
- 기술혁신의 문제와 구조적 모순문제 제기. 따라서 工業內部 충실화 촉구, 농업부문에 더 많은 자원 할당시도. 투자배분은 공업 49%, 농업

- 18%, 수출 9%. 공업투자중 중공업 83%, 경공업 17% 배분.
- 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西方으로부터 선진자본과 기술도입에 주력. 外債難에 봉착. 산업간의 불균형, 기술진보부진, 자원낭비 그리고 경공업부문의 낙후로 인하여 구조적 모순만 더욱 심화.
 - 6個年計劃을 75年 8月 早期完成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2年間 완충기를 두고 6個年計劃 未達成部門(철강, 시멘트) 完成과 次期計劃 준비로 사실상 6個年計劃을 1年 연장수행.

6. 第2次 7個年計劃(1978~84)

- 계획의 과업은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촉진시키며, 절약운동강화, 대외무역촉진 등으로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주민생활 향상에 있음. 주요목표는 국민소득 1.9倍, 工業總生産 2.2倍, 양곡 1,000萬톤.
- 국민소득과 공업총생산 등 계획목표에 실적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회의적임. 공업생산은 1.36~1.69倍로서 계획목표의 年平均 성장률 12.2%에 미달하는 4.5~7.8%에 불과함. 국민소득 또한 계획목표에 68.9%~71.6%로서 북한발표 94.7%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
- 1980年代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大展望目標」 발표. 이 목표는 2次 7個年計劃目標를 수정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 문제제기. 따라서 사실상 2次 7個年計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
- 1984年 9月 「合營法」 제정.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의 합작기업 유치시도. 이러한 점은 對內指向的 經濟政策의 限界性이 있음을 노출. 그러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적이지 못함.
- 85年~86年을 경제발전 계획조정기간으로 잡고 차기계획을 준비. 이 기간 중에도 「80年代 10大展望目標」를 계속 추진.

7. 第3次 7 個年計劃(1987~93)

- 계획의 과업은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 계속추진으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은 「10大展望目標」의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목표는 국민소득 1.7 배, 공업총생산 1.9 배, 농업 1.4 배 등으로 과거 어느 계획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현실성, 실현성을 다소 반영.
- 經濟合作 및 合營事業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액을 3.2 배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지만 社會主義市場 重視政策을 유지한다는 점으로 보아 西方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폐쇄체제를 고수한다는 뜻이 아직 담겨 있음.

8. 綜合評價

- 全般的으로 보아서 북한은 철저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의한 스탈린式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閉鎖政策과 重工業優先政策으로 이끌어 온 결과를 보면 계획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體制 및 政策의 특징으로 유발된 결과로 理解(〈表-1〉 참조).
- 50年代, 특히 5 個年計劃(1957~60)은 다소 성공적이었으나 60年代부터는 계획기간의 연장, 계획 사이의 완충기, 조정기간 등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계획목표에 차질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
- 全計劃期間을 통해 볼 때 中·蘇 그리고 他共產國의 원조와 지원이 있을 때는 계획의 실적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계획목표에 크게 못미쳐 계획연장 및 조정을 거쳐야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1차 7 個年計劃이 그러하였다. 6 個年計劃에서도 공산권의 지원은 크지 못하였으나 西方 罔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본도입을 추진하여 다소 계획목표에 성공적이었으나, 계획기간 후반에 들어서(1975年 이후) 외채지불 연기사태에

직면하여 서방으로부터 경제협력을 계속 받을 수 없었음.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구조적인 것으로, 생산설비 및 기술낙후, 부존자원 부족, 시장협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공업 부문에의 집중투자, 그리고 높은 군사비 부담(對 GNP 比 20%(1983年) 이상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 등에 있음. 따라서 다시 中·蘇의 協力, 특히 소련의 협력이 80年 이후 필요하여 다시 이들에 의존정책으로 전환. 이것은 북한경제는 국내자본 조달의 어려움과 대외경제 협력의 부진으로 中·蘇의 원조에 계획경제의 성공여부가 크게 의존되어 있음을 의미.

- 폐쇄정책,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 및 무역구조에 불균형 유발(다음 제Ⅳ장 참조).
- 70年代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의 점진적 둔화를 인정하여 과거의 동원적인 계획목표를 현실성, 실현성을 감안하여 성장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생산원가 절감, 절약운동 강화, 기술개혁 및 현대화 등 경제의 체질개선의 추진을 도모하여 과거 外延的 成長에서 內包的 成長으로 이행을 추구. 그러나 여전히 合理的인 經濟運用보다 政治思想性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경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을 제 3차 7개년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계획수행을 위하여 사상혁명이 선행하여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본주의·수정주의 사상침투를 경계하며, 3대 혁명소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表-1〉 계획기간별 성장목표와 실적

(단위 : 년평균 증가율, %)

| 계 획 | 1차 7개년 (61~67) | 6개년 (71~76) | 2차 7개년 (78~84) | 3차 7개년 (87~93) |
|-----|-------------------|----------------|-------------------|-------------------|
| 목 표 | 14.6 | 10.3 | 9.6 | 7.9 |
| 실 적 | 8.6 | 6.0 | 4.5 | |

자료 : 국토통일원.

IV. 北韓經濟構造

1. 產業構造의 特性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소련형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거한 기본경제정책에 따른 계획당국의 意志에 의해 인위적으로 산업구조가 개조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서는 産業間의 就業構造와 GNP 構成費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경우 일관된 자료의 부족으로, 단편적으로 발표된 경제계획의 목표 및 실적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部門間의 投資比重으로 工業部門에서 構造를 살펴보면, 戰後復舊 3 個年 計劃(1954~56)에서는 공업투자비중이 49.6%, 그리고 5개년계획(1957~60)에서는 55%, 제 1차 7개년계획(1961~70)에서는 56.1%에 달하는데 이 중, 重工業과 輕工業의 상대적 비율은 약 80% 對 20%로서 주로 중공업 시설확장, 건설을 강화하여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제 1차 7개년계획에서는 주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輕工業部門에 관심을 가졌다고 강조하는 기간에도 비중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중 공업총생산 3.3배에서 생산수단 3.7배, 소비재생산 2.8배라는 공식발표를 보더라도 얼마나 불균형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다.

70年代 후반에 들어와서도 중공업 부문의 상대적 확대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表-2, 3>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생산수단의 생산배수가 소비재 생산배수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보면 구조의 전반적인 것이 중공업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部門別 産業構造에서 특히 農業部門을 보면 耕地面積은 비교적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이 곡물생산(이중 $\frac{1}{3}$ 이 쌀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979年 현재 총인구중 농가인구가 42%를 차지하며 남한의

〈表-2〉 6개년계획기간의 성장율

| 구 분 | 1975 | | 1976 | |
|----------|------|-------|------|-------|
| 공업총생산 | 70년비 | 2.2배 | 70년비 | 2.5배 |
| (생산수단생산) | | 2.3배 | | 2.6배 |
| (소비재생산) | | 2.1배 | | 2.4배 |
| 년평균공업성장율 | | 18.4% | | 16.3% |

자료 : 국토통일원, 「전환기의 북한경제」, p.212.

〈表-3〉 2차 7개년계획기간의 성장율

| 구 분 | 계획목표 | 실적 |
|---------|-------|-------|
| 공업총생산 | 2.2배 | 2.2배 |
| (생산재생산) | 2.3배 | 2.2배 |
| (소비재생산) | 2.1배 | 2.1배 |
| 공업성장율 | 12.1% | 12.2% |

자료 : 국토통일원.

〈表-4〉 북한 경지면적

(단위 : 만정보)

| 年 度 | 1960 | 1970 | 1975 | 1980 | 1985 |
|-----|------|------|------|------|------|
| 面 積 | 191 | 199 | 203 | 210 | 214 |

자료 : 국토통일원.

28.9%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경영형태가 협동농장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으로서 (79年 현재 총경지 94%가 협동농장 소유, 6%는 국영소유) 노동생산성이 과거 70年代와 비교하여 정체 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현상은 농업부문의 인구는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 부문에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생산성의 둔화와 함께 집단농장화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생산의지의 저하에 있다. 〈表-5〉에서 보듯이 개발초기에는 집단영농의 잇점으로 전반적 생산

〈表-5〉 북한의 농업생산성

| 년 도 | 정보당 식량 작물 생산(kg) | 농가 인구 1인당 식량 작물 생산(kg) | 단위정보 1인당 식량 작물 생산(kg) |
|------|---------------------|---------------------------|--------------------------|
| 1970 | 2121(2997) | 769(482) | 0.38(0.21) |
| 1975 | 2139(3425) | 702(579) | 0.34(0.26) |
| 1980 | 1858(2430) | 552(534) | 0.26(0.24) |
| 1985 | 2351(3260) | 637(820) | 0.30(0.38) |

※ ()는 남한의 수치임.

자료: 국토통일원, 「전환기의 북한경제」, p. 217.

성이 남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의 경제체제적 모순이 노정됨으로써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서비스 부문에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이 부문에 투자를 非生産的 投資로 규정하여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전력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유통부문의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늦게서야 강조하고 있다.

2. 貿易構造의 特性

북한의 貿易은 경제체제와 구조의 특성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한정된 소극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前述하였다. 먼저 무역규모를 알기 위하

〈表-6〉 남북한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불)

| 년 도 | 남 한 | 북 한 | 대 비 |
|------|-------|------|--------|
| 1960 | 3.5 | 3.2 | 1.1:1 |
| 1970 | 28.1 | 8.6 | 3.3:1 |
| 1975 | 123.5 | 19.5 | 6.3:1 |
| 1980 | 397.9 | 34.2 | 11.6:1 |
| 1984 | 599.7 | 27.3 | 21.9:1 |
| 1985 | 614.2 | — | |

자료: 국토통일원, 「전환기의 북한경제」, p. 240.

여 남북한의 무역규모를 <表-6>에서 비교하여 본다.

남북한을 비교하여 보면 무역의 역할이 남북한에서 얼마나 크게 다른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주도적인 성장정책으로 對外指向的인데 反하여 다른 한편은 對外依存度를 낮춤으로써 자급자족경제를 추구하는 對內指向的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대외의존이 낮다는 뜻에서의 自立度로 볼 때 북한이 남한경제에 비교하여 훨씬 높ی 나타나며 그리고 자본재의 해외의존도는 남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⁷⁾

그리고 南北韓의 國別貿易構造를 보면 모두가 지역적 편중도가 높다는 데는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 <表-7>에 의하면, 남한은 美國과 日本, 北韓은 蘇聯, 中共 그리고 日本에 높은 무역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表-7> 남북한의 地域別 輸出入趨移

(단위 : %)

| | 1970 | | | | 1975 | | | | 1980 | | | | 1984 | | | |
|----|------|------|------|------|------|------|------|------|------|------|------|------|------|------|------|-------|
| | 남한 | | 북한 | | 남한 | | 북한 | | 남한 | | 북한 | | 남한 | | 북한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일본 | 28.0 | 40.7 | 9.2 | 6.8 | 25.4 | 33.4 | 7.3 | 17.3 | 17.3 | 26.2 | 10.0 | 24.0 | 15.7 | 24.9 | 14.6 | 22.1 |
| 미국 | 47.3 | 29.4 | — | — | 30.2 | 25.8 | — | — | 26.3 | 21.9 | — | — | 35.8 | 22.4 | — | — |
| 중공 | — | — | 15.7 | 16.2 | — | — | 24.5 | 24.6 | — | — | 18.5 | 21.9 | — | — | 18.3 | 17.8 |
| 소련 | — | — | 42.0 | 60.9 | — | — | 26.0 | 22.4 | — | — | 26.7 | 25.9 | — | — | 31.1 | 133.7 |
| 동구 | — | — | 10.3 | 6.9 | — | — | 9.3 | 7.9 | — | — | 7.7 | 7.1 | — | — | 3.6 | 3.3 |

자료 :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pp.180~182.

산업화 초기인 70年代는 제외하고 최근을 보더라도 남북한의 무역의 절반 이상이 이들 몇몇 나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나친 편중도는 결국 경제의 종속을 의미할 뿐 좋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무역의 높은 편중도는 정치적 자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

7) 이승훈,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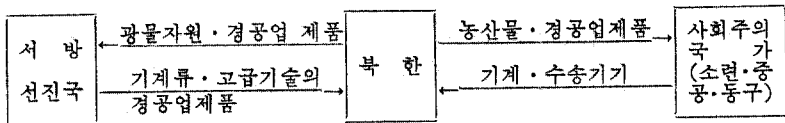
라 경제적 활동의 폭을 좁히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현상이 최근에는 70年代에 비하여 개선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오는 추세에 있음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이다.

北韓의 品目別 輸出入構造를 對西方과 對共產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⁸⁾ 먼저 對共產圈 貿易에서 中·蘇 무역이 수출입으로 보아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去來에서 구조를 살펴본다. 1972년부터 1984년 사이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에 대해 一次產品의 수출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天然資源, 農產物이 바로 그것이다. 수입에서는 기계설비 및 수송수단, 그리고 석유관련 산업제품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 중공과의 무역에서는 소련과는 달리 原料加工製品과 非食用 原材料, 天然資源의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 및 식용산 동물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중공 수출은 경공업제품과 一次原料의 수출이다. 반면 수입은 天然資源에 70~80% 집중된 단순한 구조이다.

80年代에 들어온 이후에 북한의 對西方交易을 보면 약 40%의 수출이 原料加工製造品이며 그리고 식료품과 천연자원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기계류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40% 정도, 원료 가공품과 각종 소비재가 30% 정도, 그리고 화학제품이 10%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圈域別 輸出入構造를 도식화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품목별 구조를 볼 때 북한은 경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중화학 공업제품

8) 자세한 통계자료는 연하청(1986), pp. 198~212 참조.

을 수입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온 양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으로 얼마나 不合理한 결과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의 수출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수출산업구조는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무역은 內部經濟成長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함으로 무역의 소규모나 지역편중적인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에는 낙후된 생산시설과 기술수준의 개선, 빈곤한 간접자본에의 투자를 위하여 해외자본이 필요한데, 북한과 같은 보조적인 무역을 통한, 특히 수출능력에 한계성이 있는 북한에서는 자체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外國의 合作投資를 유치할 목적으로 「合營法」을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V. 結 言

북한경제에서 수직적 구조를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독자적인 기본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난 구조의 특수성이 바로 북한경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즉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취약성, 폐쇄경제에 따른 대외경제협력 특히 西方과의 협력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자본시설 및 기술도입에의 제약, 무역의 국민경제에서 보조적 역할과 그 결과 나타난 外貨收入不足 현상, 농업집단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등 모두가 북한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기본적 요인이다.

自力更生の 原則에 의한 북한경제는 自給自足度란 뜻에서의 自立經濟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自立經濟, 즉 투자재원을 자체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自力으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국민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뜻의 自立經濟에로의 발전에는 어떤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왜 문제의 自力更生の 原則이란 정책을 고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原則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에서 유도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이것은 政經一致에 따른 것이다. 政經一致란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基調는 정치적 고려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문제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다룬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의 예속화이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건설, 남조선해방, 세계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경제운동도 이러한 틀속에서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더 정확히 말하면 金日成을 首班으로 하는 북한의 집권당인 노동당의 정치집권이 목적이며, 이 목적아래 북한경제에서 정부역할 또는 黨의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활동의 모두이며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바로 金日成 또는 黨의 역할이다. 그런데 경제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보면 결국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 자신의 選好에 따라 자기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 및 지도노선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북한은 바로 金日成이 정부이며, 따라서 경제에서 정부역할이란 金日成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主體思想에서 유도된 自力更生의 原則이 경제의 기본노선으로 유지되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경제에서 구조상의 특수성, 특히 폐쇄성의 문제해결은 결국 정치의 최고지도자의 성향과 의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데, 만약 그가 개방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전환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도 가능하여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이러한 차원에서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 고 문 헌

1.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2. 國土統一院, 「北韓概要」, 1983.
3. 李相禹, “南韓經濟의 競爭性과 補完性 研究.” 國土統一院, 「轉換期의 北韓經濟」, 1987, pp. 187~325.
4. 李承勳, “北韓經濟의 計量的 評價.” 國土統一院, 「轉換期의 北韓經濟」, 1987, pp. 43~59.
5. Kim Youn-Soo. “The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with Europe CMEA Countries.” Working Paper. Deutsches Institut für Korea-Forschung E.V. (1987).
6.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V, No. 4, Dec. 1986, AEA, pp. 1687~1738.